

투데이 칼럼

국정감사, 이번에는야말로 원전 적폐 청산해야

국정감사가 10월 10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전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묻지마식 원전 진흥 정책에 기반하여 설계된 원전 제도는 많은 적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한빛원전 민간합동 조사단'에 의해 원자력발전소 격납 건물 콘크리트 내 대형 구멍들이 발견되었다.

원전 제도 내 적폐가 한수원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제도 내 적폐가 한수원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제도 내 적폐가 한수원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제도 내 적폐가 한수원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제도 내 적폐가 한수원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제도 내 적폐가 한수원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제도 내 적폐가 한수원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제도 내 적폐가 한수원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갖고 있다. 그러나 원전은 소재지와 비소재지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피해를 끼친다. 단순한 수혜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함에도 모든 지원은 원전 소재지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적폐로 인한 배분 왜곡으로 한수원은 비소재지에 인간적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방사능방재대책법 등에 숨어있는 적폐다.

발주법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화학, 수력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에 있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기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안위가 관리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을 보면 발주법 기준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원전 안전과 방재를 담보할 비소재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중앙부처와 한수원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속에 숨어있는 적폐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방재와 외부불경제 효과(기업 경제 활동으로 인해 외부에 끼치는 악영향) 감소를 위해 사용토록 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여기에 원전 소재지와 비소재지를 따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러함에도 원전 소재지에 서만 전액 부과·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분 왜곡 또한 한수원에 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방재·안전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발미를 제공한다.

원전은 가장 위험한 문명이기 중 하나다. 따라서 고도의 투명성과 합리성 범주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왜곡된 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한수원에 방사선 사고시 1차적 비상발령권이 있다. 비합리적 제도의 틀 안에 있던 한수원이 세월호 선장과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된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불안과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들은 시험 없는 철저한 적폐청산을 주문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적폐청산 없는 발전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한수원도 원전제도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워져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본인의 임무에 충실할 때가 되었다.

완전한 적폐를 위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국정감사를 기대해 본다.

독자제언

'학교 앞 천천히' 스쿨존을 사수하자

'여기부터 속도를 줄이시오' 라는 문구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바로 이 문구는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여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앞에서 매일 볼 수 있는 문구이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을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스쿨존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고, 2018년 9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에 총 123개 구간이 지정되어 확대 설치 중이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설치된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등·하교 시간대 보호구역 안에서 차량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어린이 교통사고가 16년 431건, 17년 414건 발생하여 평균적으로 매일 1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사선으로 횡단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신체가 작아 눈에 띄지 않기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튀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보행하는 어린이를 주의 깊게 살펴 운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운전 중에 '여기부터 속도를 줄이시오' 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되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속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정재훈 원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인도네시아 지진 쓰나미 사망자 1234명 늘어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지난달 29일 한 남성이 지진과 쓰나미로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안고 걸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일 이번 지진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를 1234명으로 잠정 발표했다.

사설

전북 발전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야 한다

전북 발전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야 한다. 전라감영 건축 일이 순조롭게 진척되어 이제 머지않아 그 본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다. 아직 완공된 것이 아니기에 가림막으로 가린채 전주시가 건설 현장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오가면서 눈길을 주다보면 기초석 위의 기둥들은 우뚝한 테고 지붕 또한 웅장하고 늘름할 거라는 짐작이다. 조선시대 때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아울러 관장하던 전라감영의 위용이 새삼 그리워지는 것이다.

전라감영 복원은 전주시민은 물론이고 전체 도민의 자존심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분명히 그래서 서였을 것이다.도시사는 "정도 천년을 맞아 발전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게 연초 때의 공표라서 오래됐지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때 기초 자치단체장들도 발전 방향을 밝혔었는데 그 성취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이제 올해도 석 달밖에 안남았다.

우리 전북 지역에는 지난 수년간 안 좋은 일이 많았다. 군산 현대 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GM 폐

쇄 사태와 남원의 서남대 폐교는 다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익산 넥슬론의 파산 소식도 그렇고 전주 현대자동차의 생산물량 축소 소식도 그렇다. 하지만 전북도는 도민과 함께 힘내야 한다. 최근까지도 기금 운용 분부정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들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합찬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는 정부를 향해 전북의 발전이 전국 균형발전의 이정표라고 강력하게 말해야겠다.

전북도는 전북의 자존과 재부활기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현재 우리 지역은 희망하는 바와 반비례하여 낙후가 심화되고 있다. 전북 발전 프로젝트에 계속 힘을 실어야 하는 이유는 그때문이다.

전북도는 톨파구를 열어야 한다. 그 톨파구를 열지 못하면 지난해보다 더한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나이든 기성 세대들은 옛날을 회고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중반에는 거주 인구가 265만을 헤아렸다. 전북도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 프로젝트에 많은 힘을 실어야겠다.

고용 절벽 이대로 내버려둘 것인가

고용 절벽이 심각하다. 얼마 전에 고용 쇼크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그때 일자리 엔진이 꺼져버렸다는 표현도 있었다. 그때 파악된 실업자만 매달 6천 명 이상 생겨나고 있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런데 앞으로가 열려야 한다. 갈수록 문제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한 보도 기사에 따르면 취업자는 7천 명이 줄고 실업자는 4천 명이 늘어났으니 말이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절벽이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정말이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뭔가 내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기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고용 문제의 끝모를 추락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전북의 경우는 아예 늘 빨간불 신호 등이다.고용률이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 부끄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전북도가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도가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두 번 강조한 게 아닌데 말이다.

전북도는 먼저 술선수벌하는 자

새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청년 취업률이 미미한데도 어떻게 물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달구어야 한다.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거듭 당부하거니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하니 오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관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전북도는 젊은이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청년 고용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정경성이 관건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절벽에서 벗어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